

구제역 막기도 힘든데 AI까지... 전남도 초비상



28일 영암호에서 수만 마리의 가창오리떼가 날아오르고 있다. 철새도래지인 영암호와 인접한 농경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전남도 양계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계림동 호남시장 주택재개발지역 염주주공아파트 재건축지역 포함

광주시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 심의

석락을 거듭하고 있는 동구 계림동 호남시장 일대와 산수동 동진맨션 일대가 주택재개발지역에,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 지원시설로 사용될 예정인 서구 염주주공아파트가 주택재건축지역에 새롭게 포함됐다.

광주시는 28일 "이날 오후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2020년까지 광주 도심 내 노후 단독주택·상업지역 및 아파트 단지 123곳을 정비하는 계획을 담은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141곳에서 18곳이 감소한 것이다. 25곳이 정비가 완료되거나 정비

가능성이 적어 예정구역에서 해제됐고, 12곳이 신규로 포함됐다.

대한토지주택(LH)공사나 광주시 등 공공기관이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현지개발·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건립하는 전면개발·혼합방식 등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은 67곳이다. 주민들이 주체가 돼 조합을 설립해 정비를 추진하는 주택재개발(단독주택지역 대상)은 29곳, 주택재건축(아파트 대상) 18곳, 도시환경정비(상업지역 대상) 9곳 등이 선정됐다.

신규예정구역은 노후불량률 80%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내대지 면적 10% 이하 등의 조건에 따라 지정됐다. 동구의 신규 정비예정구역은 계림 5-3구역(계림동 호남시장 일대), 산수2구역(산

수동 동진맨션 일대), 서구는 마북동연화구역(마북동 47-7번지 일대), 화정동 염주주공구역(화정동 621번지 일대) 등이다. 북구에서는 용두구역(용두동 152번지 일대), 중흥 3구역(중흥동 647번지 일대), 풍향 3구역(풍향동 591번지 일대)이, 광산구에서는 비아구역(비아동 199번지 일대), 옥동구역(옥동 530번지 일대), 선창구역(신가동 485번지 일대), 부동구역(부동마을 일대), 서동구역(서동마을 일대) 등이 예정구역이 됐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또 송원대학의 4년제 승격과 관련 대학교와 산하 중·고교의 부지를 분리하는 안과 광주시 광산구 호남대 제2캠퍼스의 체육시설 부지 추가 편입하는 안 등을 원안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년전 악몽 또... 양계농가 몸서리

고천암 등 철새 수만마리 감염 가능성

관리농장 지정·이동제한 등 방역 강화

안동발(發) 구제역이 경기·강원·인천·충북까지 번지는 등 걸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전남의 폐사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전남 축산·양계농가가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양계농가들은 2년 전 영암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223억 원의 피해를 입은 재앙이 또다시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극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도 구제역 도내 유입을 차단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류인플루엔자까지 덮치면서 훨씬 힘겨워진 방역 전장을 치르고 있다.

◇2년 만에 전남 AI 발생, 양계 농가 덮치나=이번에 AI가 발견된 곳은 철새 도래지인 해남군 산이면 영암호와 인접한 농경지다.

지난 22일 폐사된 채 발견된 가창오리 74마리 중 20마리의 시료를 채

취해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때만 해도 가창오리 감염에서 범세가 발견된 점에 주목, 농약이나 독극물에 의한 폐사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1마리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하하는 구제역을 막기 위해 안감함을 쓰고 있는 전남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I 감염이 확인된 가창오리가 발견된 현장이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고천암호와 8km 정도 떨어져 있고 영암호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이 일대에서 겨울을 나는 10만여 마리의 철새가 무더기로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해남 고천암호와 영암호에는 5만~6만 마리가 찾아와 겨울나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 일대는 매년 12월부터 2월 말까지 가창오리 등 철새 20만~30만 마리가 찾아온다.

이 곳 뿐만 아니다. 전남도내 철새도래지인 ▲순천만 ▲주암댐 ▲강진만 ▲특량만 ▲함평 대동저수지 ▲해남 고천암 ▲나주 영산강 ▲고흥 해창만·고흥만 ▲영암 영암호 등 10곳에 달한다. 전남도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

◇공포 염습, 악몽 재연되나=전남도는 특히 예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류인플루엔자의 양계 농가 유입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영암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14만 8000마리의 닭·오리가 살(殺) 처분되는 등 223억 원(69억)의 피해를 입었고 2003년(나주)에도 22만 2000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현재 도내 양계농가는 닭 1만 3000가구(3148만 6000마리), 오리 943가구(613만 3000마리) 등 1만 3943가구(3761만 9111마리)에 달한다.

오리는 전국 생산량의 48%(전국 1위), 닭은 12.4%(전국 4위)에 이른다. 자칫 도내에서 검출, 농가에서 기르는 가금류에 전파되더라도 하는 날에는 지역 양계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AI 발생 지역

을 비롯, 인근 10km 이내 가금류 사육농장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농가에 대한 방역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향후 30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집중적으로 예찰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농장에서 AI가 발견될 경우 반경 500m 이내의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3km 이내 농장은 '위험지역'으로 분류, 이동제한을 받게 되며 10km 이내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번처럼 철새 AI의 경우 이같은 관리대상을 정하기 어렵지만 일단 10km 이내 농장에 대해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방역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남의 경우 폐사 장소에서 3km 이내에 오리농가는 없지만 닭 사육농가 1곳이 있고, 10km 이내에도 오리농가는 없고 닭농가만 43곳이 81만 7000마리를 키우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AI에 감염되는 경우 임상증상 없이 이르면 24시간 안에 집단폐사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구제역도

재난에 포함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가축살처분 보상금 2298억 8900만원과 백신접종비를 포함한 가축방역비 104억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391억 2000만원 등 2794억 90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임동욱기자 tuim@

시도민대책위 도청별관 원형 고집

추진단 최종안 반대...갈등 재연 불가피

5·18 사적지 원형보존을 위한 광주·전남 시·도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발표한 옛 전남도청 별관 부분 보존 최종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서 또다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2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원회'(이하 10인 대책위)가 추진단의 최종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대책위와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의 최종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최대 격전지이며 저항과 국가 폭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옛 전남도청 별관을 보존하고 이를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국민과 광주·전남 시민의 열의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원형 보존'을 거듭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추진단은 별관 문제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지난 2년여 동안 논의 및 추진과정에서 철저히 배제시

키고 일방적인 통보만 거듭해 왔다"라며 이번엔 추진단장의 옹호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추진단은 개관지연과 예산축소 운운하며 마치 문화의 전당 사업이 대책위의 반대로 인해 완공시기가 늦어지고 예산축소가 수반될 문화의 전당이 건립되지 않을 것처럼 호도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며 "지역사회와 추진단에 공개적인 토론회를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에 대해서도 "연내 발표라는 조금하에서 벗어나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향후 옛 전남도청 별관이 '오월의 문'을 포함한 원형보존이 이뤄지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력해 나가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원회'(이하 10인 대책위)는 29일 오후 4시 광주시청에서 옛 전남도청 별관 부분 보존 최종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10인 대책위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전세계 35개국 46개 주요 도시에서 62명의 해외 특파원들이 현지뉴스를 전달합니다

뉴미디어를 선도하는 연합뉴스

국내외에 방대한 취재망을 갖춘 연합뉴스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뉴스서비스,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 영어·일어·중국어·아랍어·스페인어·프랑스어 등 6개국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뉴미디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뉴스통신사

